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갑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23
----------	------

발의년월일 : 2021. 03.

발의의원 : 박갑상 의원

김대현 의원

황순자 의원

임태상 의원

배지숙 의원

김동식 의원

이진련 의원

1. 제안이유

가. 정부의 규제 개선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개발사업계획 입안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청취방법을 개선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추진 시 발생할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방법 개선(안 제8조, 안 제9조)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의견 청취를 공고할 경우 계획(안)을 첨부파일로 공개하고,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대상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며, 그 공고·열람방법을 기존 방법에 추가하여 우편물 발송, 옥외광고물(현수막, 벽보 등) 게시 등 다양한 수단의 활용을 허용함

- 도시관리계획안 재공고·열람도 제출된 주민의견 내용이 법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 외에는 다시 공고·열람하게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사전자문 등 계획조정기능 강화(안 제17조)

- 고층의 일반아파트,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주민의견 청취 전에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함

다. 여건변화 반영 등(안 제84조의2, 안 제84조의4)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해 법령에서 규정한 기존 용적률 완화에 추가하여 건폐율도 완화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붙임1 참조)

나. 관계 법령(붙임2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계획내용 및 사유, 위치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첨부 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가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 위치도면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을 말한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편물 발송,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게시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토지의 이용도가 낮아지는”을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개정 2012. 11. 12 조례 제4444호)”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역 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법 제113조에 따라 설치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제4항 중 “도·시군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의2(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75조 또는 제80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4조의4의 제목 “(연구개발특구 안에서의 용적률)”을 “(연구개발특구 안에서의 용적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안에서 녹지지역의 용적률은 제80조제1항”을 “안에서의 녹지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75조 또는 제80조”로,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 해당 구·군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 ----- ----- ----- -----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계획내용 및 사유, 위치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가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 위치도면은 생략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을 말한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p>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토지의 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
상)(개정 2012. 11. 12 조례 제4444
호)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부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2. 11. 12 조례 제4444호) <후단 신설>

편물 발송, 옥외광고물(「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옥외
광고물을 말한다) 게시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

---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
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
지 아니한 -----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
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단서 삭제> -----

-----, 이 경우 구
역 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③ (생략)

④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제84조의2(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
적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
적률은 제80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
역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
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84조의4(연구개발특구 안에서의 용
적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녹지지역의
용적률은 제80조제1항에 따른 녹
지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의 15
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이 경
우 건축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한
다.

여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법 제113조에 따라
설치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자
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시·군계획
조례-----
-----.

제84조의2(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
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75조
또는 제80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4조의4(연구개발특구 안에서의 용
적률 등) -----

----- 안에서의 녹지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75조 또는
제80조-----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
-----.

(붙임2)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
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제1호 ~ 제4호 (생략)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21. 1. 12.>

제1호 ~ 제4호 (생략)

③ ~ ⑥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 도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해당 도로와 접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2)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 나)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2. 삭제 <2019. 8. 6.>
3.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 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50퍼센트 미만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은 제외하며, 건축물 높이의 변경은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 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 6의2. 체육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체육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6의3. 문화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의4. 장사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장사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장사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장사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삭제 <2019. 8. 6.>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 ② (생략)

④ 법 제5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2.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4.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5. 삭제 <2012. 4. 10.>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
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제8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② ~ ⑤ (생략)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
하는 시·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
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하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 제4호 (생략)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호 (생략)